

국 제 법

해설 위원: 이 상 구 교수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 1.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 ② 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③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 ④ 국가가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하면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②

해설:①주권면제는 강행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 ③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면제의 목시적 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소에 대해서도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④타국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는 면제의 목시적 포기가 아니므로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문 2.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재는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개와 같다.
- ② 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 혹은 사인 간에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 ③ 중재에서 재판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절차가 없다.

정답:④

해설:①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중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②중재는 국가와 비국가적 실체 간에도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ICSID중재의 경우 투자자 개인과 피투자국가 사이의 중재이다. ③합의에 의해 타국 국내법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 있다. 재판준칙 설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문 3.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영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
- ③ 영사 면제 및 특권은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영사만이 향유한다.
- ④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한 접수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답:①

해설:②접수국의 동의하에 외교업무 수행할 수 있다. 즉, 본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③접수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접수국의 동의하에 파견국의 영사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직무에 관한 면제와 특권은 향유한다. ④영사인가장 거절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문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해의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특정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 ②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 ③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 ④ 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으로 삼을 경우, 만 폐쇄선 안쪽의 수역은 영해로 본다.

정답:③

해설:①경제적 이익이 있고 그 중요성이 관행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②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선이 될 수 있다. 간출지의 전부나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④만 폐쇄선의 안쪽 수역은 내수에 해당한다.

문 5. 상공 및 외기권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통행이 적용되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空域)이다.
- ④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적 성격을 가지는 영공으로 간주된다.

정답:①

해설:①통과통행은 타국의 권리이므로 연안국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②달은 인류의 공동유산에 해당된다. 단, 이는 1979년 '달 및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것이다. ③방공식별구역은 접속수역 상공을 말한다. 연안국의 주권은 인정되지 않고 관행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공역이다. ④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할당되어 비행정보와 경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정 구간의 공역이다. ICAO는 전 세계 공역을 세분하여 각 구역마다 책임 당국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관제정보를 통신으로 제공하게 한다.

문 6.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금지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출입할당
- ㄴ. 수출입허가
- ㄷ. 최저수입가격제도
- ㄹ.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면허제도
- ㅁ.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
- ㅂ.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ㄷ, ㄹ, ㅁ

④ ㄷ, ㄹ, ㅂ

정답:①

해설:

ㄱ(O). 수출입할당은 GATT 11조 1항에 명시된 수량제한조치로서 금지된다.
 ㄴ(O). 수출입허가 역시 GATT 11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수량제한조치이다.
 ㄷ(O). 최저수입가격제도는 GATT 11조 1항에 규정된 '기타 조치'에 해당된다. 최저수입가격제도는 수입 상품이 지나치게 낮게 들어오지 않도록 상품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미만 가격에 해당되는 상품의 수입은 금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입제한효과를 초래하므로 수량제한조치에 해당된다.
 ㄹ(X).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 면허제도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ㅁ(X).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은 수량제한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내국민대우와는 관련이 있다. 이러한 법령이 국산품과 수입상품 간 경쟁조건을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다.
 ㅂ(X).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GATT 11조 2항에 의해 수량제한금지의 무의 예외조치로서 인정된다.

문 7.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4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 ② 전시 점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의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
- ③ 피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 ④ 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②

해설:②점령국은 원칙적으로 점령지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하나, 점령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

문 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선진국이 배정받은 킬토보다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차이를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하면서도 감축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다.
- ③ 「파리협정」은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역사적 누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한정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 ④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별 감축은 개별 국가가 5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 방안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정답:④

해설:①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교토의정서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②교토의정서는 부속서1국가들에 한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비부속서1국가들은 감축의 법적 의무가 없다. ③파리협약은 보편적 체제로서 모든 당사국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문 9.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
- 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
- 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
- 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정답:③

해설:

- ㄱ(X).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와 협의를 조건으로 한다.
- ㄴ(X).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WTO에 통보하고 수출국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ㄷ(O).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는 일방적 조치이다. 단, 20조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ㄹ(O).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는 일방적 조치이다. 제21조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ㅁ(O).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는 계약국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WTO설립협정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문 10.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조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그 행위국의 피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무를 완전하게 면제시킨다.
- ②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 ③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조난(distress)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긴급피난(necessity)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답:④

해설:①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의 경우 국가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나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더라도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긴급피난의 경우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과 국제공동체 이익을 비교衡量했을 때 침해되는 국제공동체 이익이 더 크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문 11. 국제연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
- ㄴ.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 ㄷ.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출
- ㄹ.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③

해설:

- ㄱ(X). 국제연합 사무총장 임명은 안보리 권고에 기초하여 총회가 임명한다.
- ㄴ(O).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은 총회의 단독 권한이다.
- ㄷ(X).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선출직이 아니다.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총회의 단독권한이다.
- ㄹ(O).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 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은 총회의 단독권한이다(헌장 제19조). 불가항력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문 12.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다.
- ②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다.
- ④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제적으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진정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정답:③

해설:③개인청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구제를 완료해야 한다.

문 13.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적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국제연합 가입과 국제연합 회원국 상호간의 국가승인은 별개 문제이다.
- ③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철회로 간주된다.
- ④ 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②국제연합에 가입한 경우 신국가가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당연히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가입에 찬성한 국가는 신생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미승인국도 국제법상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③외교관계가 단절되어도 승인의 효력은 유지된다. 철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④무력으로 수립된 국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승인의무가 있다.

문 1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접수국이 아닌 제3국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② 제3국은 통과 중인 통신문 및 외교행낭에 대한 불가침성을 접수국에서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 ③ 제3국은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④ 제3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의 귀국 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정답:①

해설:①채류목적은 구분해야 한다. 사적인 채류의 경우 불가침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②③④는 외교관계협약 제40조 규정 참조.

문 15.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자위권 발동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하며,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는 공격을 당한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 ㉡ 침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 중에는 피침략국이 영토 침범 상태하에 놓여 있더라도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국제연합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권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항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정답:②

해설:②안보리가 개입하는 경우 자위권 발동이 중단되나, 안보리의 개입이 실효적일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경제제재조치에 한정되는 조치를 취한다면 실효적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위권 발동을 중단할 의무가 없다.

문 16.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관한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구두로 발표된 일방적 선언은 이를 명백히 수락한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로 인정된다.
- ㉢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발표되어야 한다.
- ㉣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③

해설:③일방적 선언은 특정국가를 상대로 발표될 수도 있다. 국가이외의 다른 실체에 대해서도 발표될 수 있다. 국제공동체 전체를 향해 발표된 경우 대세적 의무가 창설된다. ①일방적 선언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일방적 행위는 자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제3국이 명백히 수락한 경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외교장관 이외의 다른 장관의 경우 그 권한범위 내에서 일방적 행위를 발표할 수 있다. ④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문 1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그 착오를 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 조약문의 가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조약문의 가서명은 해당 대표의 본국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약의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 ㉣ 조약문의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④서명, 가서명, 조건부 서명은 정본 인증 절차에 해당된다. ①협약 제79조에 의하면 착오문에 적당한 정정을 가하고 그 정정에 가서명하여 착오를 정정할 수 있다. ②협약 12조에 의하면 교섭국간 합의를 조건으로 가서명이 정식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조건부 서명에 대한 설명이다. 조건부 서명은 본국의 확인에 의해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문 18.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 ㉡ 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의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당 기구 및 소재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 ㉣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③

해설:③묵시적 권한 이론에 의하면 조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국제기구의 목적 달성과 양립하는 권한은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국제기구 목적 달성과 양립하지 않는 권한은 추론될 수 없다. ①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조약 규정에 의해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된다. ②상주대표부 설치의 관습법의 지배가 아니라 관련 '조약'의 지배를 받는다. ④한시적 업무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도 그 직무에 관한 면제는 인정된다.

문 19. 우리나라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 ㉡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 ㉢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
- ㉣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 ㉤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②

해설:

㉠(○). 인적관할권이란 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말한다. 국적은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부모양계혈통주의란 자녀는 부의 국적이나 모의 국적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X). 국적 결정은 국가의 재량권이다. 다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X).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 복수국적자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문 2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연안국의 접속수역은 내수를 포함하며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및 군사적 목적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역이다.
- ㉡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연안국은 자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범인 체포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 ㉣ 외국항공기는 연안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정답:③

해설:①접속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4해리까지 설정되므로 내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접속수역의 목적에 군사적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민사 관할권 행사를 위해 선박을 원칙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단, 선박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에서 나와 영해를 항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채무 불이행 선박의 경우에는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영해 상공은 영공이므로 외국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하지 않는다.